

#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

## 6·2 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심으로\*

지 병 근 | 조선대학교

이 연구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천방식의 타당성을 규범적 또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여론조사 응답자에 의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여론조사가 과연 투표경선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모집단, 즉 선거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의 6·2 지방선거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응답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후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표출되는 한국유권자들의 후보선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이 유능한 후보선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공천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제어:** 후보공천, 후보결정권자, 여론조사, 투표, 표본추출, 민주주의, 지방선거

“여론조사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 가수를 뽑을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팬클럽 많은 사람을 뽑아서야 되겠느냐”(심상정, 유시민과의 경기지사 후보단일화를 부정하며, 조선일보 10/05/29).

이 연구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활용된 이후, 점차 여론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사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다양한 공직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여론조사는 이제 단순한 정보획득수단이라기보다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식적 정치과정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정당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효율적으로 공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모종린·전용주 2004; 강원택 2009). 하지만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 선출방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은 첫째, 규범적인 차원에서 설문응답자(survey respondent)가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로서 기능하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천방식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둘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현행여론조사가 모집단, 즉 선거구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립적인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여론조사가 투표경선을 대신하여 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천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추출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투표율 사이의 차이가 무시할만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정하고, 최근 시행된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과정에 대한 사례분석과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n Institute, EAI)의 2차례에 걸친 전국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후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표출되는 한국유권자들의 후보선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이 유능한 후보선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규범적인 차원은 물론 방법론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경선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연구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선출방안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타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선출방안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연구의 I절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공천과정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과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제도가 도

입된 정치적 맥락을 설명할 것이다. II절에서는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행위의 특성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여론조사를 이용한 한국 정당들의 공직후보자선출을 규범적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며, III절에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공천과정에서 활용되어온 기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IV절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경선과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I. 공직후보자 선출과 여론조사

### 1. 6·2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 유형

과거에도 공직선거에 출마를 고려하는 후보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직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공천경쟁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론조사는 이전처럼 후보자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숙고'를 위해 활용하는 단순한 정보수취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선다. 여론조사가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들 사이의 선거연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는 더 이상 후보자 개인의 '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정치과정의 일부가 된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첫째, 양당의 중앙 및 시도 공천심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삼아 공천심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여론조사는 단순한 공천심사자료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출을 위해 국민경선(여론조사 100%)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해 부산에서 국민참여경선(당원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을 시행하였으며, 한나라당 또한 서울시장과 제주시장을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선거인단 80%: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참여 30% 포함, 여론조사 20%)를 통해 선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표 1〉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광역단체장 후보공천

	대상 지역 및 선출방식	선거인단 비율(%)	여론조사 비율(%)
한나라당	서울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80	20(6,000명)
	제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80	20(3,000명)
민주당	서울 국민경선	0	100(2,000명)
	부산 국민참여경선	50	50(2,000명)
후보단일화	경기	50	50(4,000명)
	제주	40	60(1,000명)
	부산	0	100(3,000명)
	경남	40	60(2,000명)

\*괄호 안의 수는 여론조사의 표본 총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를 최종적으로 공천하였다.<sup>1)</sup>

셋째, 여론조사는 또한 정당공천 후보자들 사이에서 후보단일화의 기제로서 활용되었으며, 경기도지사(민주당 김진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와 제주도지사(민주당 고희범, 국민참여당 오옥만, 민주노동당 현애자), 부산시장(민주당 김정길, 민주노동당 민병렬, 진보신당 김석준), 경남도지사(무소속 김두관, 민주노동당 강병기)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하였다. 후보단일화경선에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은 다양하였는데, 경기지사의 경우 선거인단(50%)과 도민여론조사(50%)를 같은 비율로,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도민참여단여론조사(40%)보다 일반여론조사(60%)를 더 많이, 경남도지사의 경우 시민배심원 전화조사(40%)보다 일반국민여론조사(60%)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만을 반영하였다(경향신문 10/05/13; 제주의 소리 10/05/10; 중앙일보 10/05/13).

## 2. 공직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 도입 배경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은 첫째,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유권자들

1) 양당이 각각 공직후보선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제 또는 국민경선제, 국민참여경선제, 시민(국민)배심원제 등은 모두 경선과정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의 선호에 조응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당원만이 후보선출권자에 포함될 경우 일반국민들의 선호와 거리가 있는 후보자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한 사회경제적 또는 이념적 특성을 갖는 정당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여론조사는 후보자들 사이의 협력을 용이하게 만들고 정당 내부는 물론 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한 후보공천이 갖는 이러한 장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셋째, 하지만,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방식이 널리 시행되는 이유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만이 아니라 윤종빈(2008)과 강원택(2009)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개방적 참여”를 통해 본선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sup>2)</sup>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의 경선에 당원투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기로 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누렸던 국민참여경선의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sup>3)</sup> 2009년 민주당의 김진표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과 경기지사후보단일화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경선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과 동일한 비율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러하다.

넷째, 후보공천과정에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데에는, 정당의 지역조직 정비라는 당권파의 정치적 목적이 부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의 경우 당원 또는 비당원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역 후투세력과 유착한 정치인들이 지역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후보자로 선출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중앙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지역당원의 지지기반이 약하더라도 공천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잔(Hazan 2006, 121-122)은 카르텔정당모델에 기초하여 당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정당공천의 민주화가 지도부에 도전적인 중간활동가(middle-level activist)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활동가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단순히 권력을 정당지도부에 집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당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박경미(2008, 57)가 지적하였듯이 진성당원이 부족한 한국의 정당정치상황에서 중앙

2) 윤종빈(2008, 50)은 흥행을 노린 “정략적 의도”와 더불어 “정치지도자의 정치협상력 부재”, “책임정당정치의 부재”를 여론조사 활용의 이유로 보았다.

3) 당시 여론조사 반영비율에 대한 논의는 조선일보(07/05/10; 07/08/01) 참조.

당 또는 정당 지도부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지역정당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통한 개방형 공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II. 여론조사 활용의 규범적 문제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은 투표경선과는 매우 상이하다. 하나의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후보선출권이 당원에 국한되지 않은 개방형 경선의 경우, 비록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선출권자가 정치적 선호를 표명하는 방식과 이를 위해 선출권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참여 수준, 참여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중성 및 책임성, 정당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천방식은 무엇보다 선출권자가 피조사자인 응답자로 수동적으로 표출된 이들의 정치적 선호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투표경선과 구별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은 투표행위에 비해서 참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따라서 참여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여론조사는 매력적이다. 반면, 투표경선은 참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선출권자가 신중하고, 책임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표 2〉 후보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와 투표

이슈	여론조사	투표경선
정치적 선호 표명	정치적 태도(attitude)	참여 행위(behavior)
선출권자(주도)	수동적 조사 응답자	적극적 유권자*
상대적 참여비용	저*	고
참여도	고*	저
신중성, 책임성	저	고*
정당의 주관비용	저*	고
모집단(당원, 유권자)의 대표성	고*	고* (개방형)
후보/정당 홍보효과	고*	고* (개방형)

\* 장점

그렇다면,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적 선거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론조사의 대상인 응답자가 민주주의적 정치행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강원택(2009, 42)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참여가 아니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반응”하고 “자신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 결과를 수용할 태세”도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자발적이지 않으며, 더구나 자신들의 분명한 의지 또는 여론조사의 용도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한다. 그런데 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단순한 의견표출행위를 통해 ‘선출권자’로서 후보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모집단인 선출권자 가운데 표집에 포함된 지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후보공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은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설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보선출방식은 선출권자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적 선거에서 요구되는 보편성과 직접성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나아가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공직후보선출방식은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이현우 2006; 이동운 2008; 강원택 2009).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를 옹호하는 이들은 첫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명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과정에서 후보자와 공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유권자의 참여도가 현격히 낮은 투표경선보다 여론조사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정당의 입장에서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후보공천의 개방성은 정당의 밀실공천을 극복하는 공천민주화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예를 들면, 박명호(2007)는 후보공천과정에서 분권화와 개방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후보자 또는 경선에서의 선출권을 비당원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의 “활용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III.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강원택(2009, 53)은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선출과정의 문제점으로 이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결과 예측이 실패한 사례를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오차는 물론 문항의 워딩, 조사자의 태도 등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의 문제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sup>4)</sup>

혹자는 강원택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보편적으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관행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들이 결코 무시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저수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자료 수집을 마쳐야 한다.<sup>5)</sup> 언론사의 경우 조사기관은 하루 정도의 조사기간이 주어진다(김춘석·정한울, 2010). 아울러 자료조사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 기관에서 여론조사의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여론조사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원자료(raw data)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당의 임의적 표본추출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 한하여” 전화면접을 이용한 국민선거인 구성비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공모에 응한 국민선거인 중 45세 미만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행규정을 45세 미만이 30% 이상이 안 될 경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

4) 강남준(2002, 129)은 유선전화가입률 및 등재율의 하락, 연령별 재택률의 편차 등 유선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ARS와 전화조사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조성겸(1997), 조성겸·김지연·나윤정·이명진(2007), 김춘석·정한울(2010) 등을 참조할 것.

5)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사과정을 모두 녹음하는 업체는 6,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07/08/01).



출대회에 한하여 그 부족분은 45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sup>6)</sup> 이는 젊은 유권자들의 재택을 하락에 따른 응답률저하를 고려하여 편의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방법론 차원의 문제점은 과연 후보경선 시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투표경선 또는 본선에서의 투표행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관련한 것이다. 달리 말해, 앞서 언급했던 표본추출 방식을 포함한 여론조사의 디자인과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후보경선시기의 여론조사가 투표경선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예측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방송 3사가 선거 후 출구조사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경합지역의 당선자를 가려낼 만큼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처럼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sup>7)</sup>

#### IV.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경선과 투표

이 절에서는 후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가 투표경선결과 및 본선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가 최소한 기능적으로 투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langle \text{수식 1} \rangle S_{i,t-1} - V_{i,t-1} = \Delta a_{i,t-1}$$

$$\langle \text{수식 2} \rangle S_{i,t} - V_{i,t} = \Delta b_{i,t}$$

위의 수식에서  $V_{i,t}$ 와  $V_{i,t-1}$ 은 각각 선거시기( $t$ )와 후보경선시기( $t-1$ ) 후보  $i$ 에 대한 투표율,

6) 한나라뉴스. 2010.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 5. 3(월)로 변경.”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779](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779)(검색일: 2010. 07. 25).

7) 6·2 지방선거 후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티엔에스 등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역대 처음으로 16개 모든 광역에서 3,000여 명의 조사인원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무려 13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한겨레 10/06/04. 8A).

$S_{i,t-1}$ 은 후보경선시기에  $i$ 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낸다. 만약 후보경선시기  $i$ 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과 투표율의 차이가 없다면( $\Delta a=0$ ), 이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보경선이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의지를 측정함으로써 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후보경선시기에 후보  $i$ 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선거시기 득표율과 동일하다면( $\Delta b_i=0$ ), 이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보경선방식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비록  $\Delta a_{i,t-1}$ 과  $\Delta b_i$ 가 0이 아니더라도 이에 가까울수록 각각 유권자와 후보 또는 정당의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의 타당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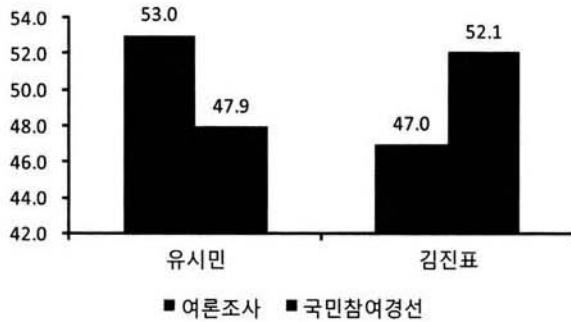
여기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Delta a_{i,t-1}$ 과  $\Delta b_i$ 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와 유권자여론조사를 병행하여 경선을 진행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경선 자료와 EAI의 두 차례(1차: 2010. 5.4-6, 2차: 6.3-5)에 걸친 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sup>8)</sup> 전자의 경우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EAI 패널조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광역단체장후보경선 또는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1차)와 선거후(2차)에 이루어졌으며, 각 시점에서 응답자의 선호후보 또는 투표후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경선시점과 본선 사이에 이루어진 유권자들의 태도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Delta a_{i,t-1}$ 의 크기는 집합적 수준에서 후보자들이 국민참여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득표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측정할 것이며,  $\Delta b_i$ 의 크기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조사를 통해 두 개의 상이한 시점( $t-1$ ,  $t$ )에서 지지후보와 투표후보의 차이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통해 측정할 것이다.

## 1. 여론조사와 투표

앞서 밝힌 것처럼 여기서는 국민선거인단에 대한 조사와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경선을 진행한 경기도지사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비록 국민선거인단 등록을 통한 정치적 선호 표출이 현장투표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단순 응답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행위라고 볼 수 있다.<sup>9)</sup> 따라서 국민참여선거인단과 일반

8) 전국의 만 19세 이상을 대상(1차 1200명, 2차 904명)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가 이용되었으며 한국리서치가 주관하였다.

9) 경기도지사후보단일화 경선을 위해서 각 후보자들은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이들 가운데 표본



\* 출처: 프레시안(2010/05/13).

〈그림 1〉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경선에서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각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투표경선과 여론조사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이 추진한 경남도지사과 부산 및 제주시장의 후보단일화경선은 후보자들 사이의 합의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사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와 유권자여론조사를 병행하여 경선을 진행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경선과 제주시장경선 또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결과가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에 따라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후보단일화경선에서 국민참여당 후보였던 유시민은 전체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 김진표를 매우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양자가 얻은 득표율 평균의 차이는 겨우 1퍼센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시민과 김진표의  $\Delta a_{i-1}$ 은 각각 5.1과 -5.1이었다. 국민선거인단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지만, 이들로부터 두 후보들이 얻은 지지율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참여비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경선이 현장투표가 아닌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선거인단의 투표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선호를 표출하는 여론조사에서와 달리 선거결과를 고려하는 신중함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출권자들은 선거인단 등록절차를 마쳐야하는 불편함과, 관련정보를 수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지불해야한다. 반면, 여론조사의 응답자들

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일간 경기 10/05/03; 오마이뉴스 10/05/11).

은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의사 또는 투표의지를 표명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용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민선거인단조사에서 정보접근의 어려움 또는 투표참여의지가 약한 저학력 저소득층 젊은 유권자 층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 여론조사에 비하여 과소대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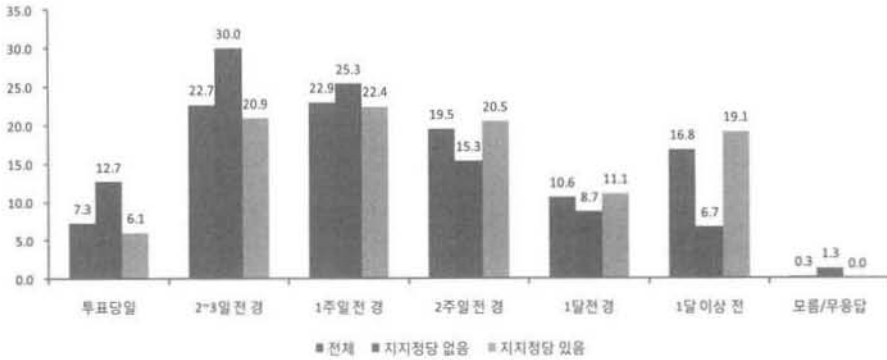
후보단일화를 위해 양자 사이에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현장투표가 아닌 전화조사를 통해 경선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세가 강했던 민주당의 조직 동원을 우려한 유시민 후보 측의 요구와 김진표 후보 측의 양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10/05/04).<sup>10)</sup> 만약 전화조사 대신에 현장투표가 이루어졌다면  $\Delta a_{i,t}$ , 즉, 국민선거인단조사와 여론조사의 격차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협상내용은 선거인단에 속한 개인 또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부담하는 경선참여 비용이 투표율과 경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2. 여론조사와 본선 경쟁력

앞서 밝혔듯이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Delta b_{i,t}$ 가 0에 가깝거나, 최소한 선거기간( $t-1 \sim t$ )에 발생하는 유권자들의 선호변화가 정당 후보자들( $i$ )의 득표율 순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갖기는 매우 힘들다. 첫째, 선거전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의지를 표명한 유권자들이 본선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과다 대표된 이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의 본선경쟁력이 과장될 수 있다. EAI 1차 패널조사에서도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의사 표명한 이들 가운데 8.0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당일체감이 역사적으로 강하게 내면화되지 않은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며, 따라서 각 정당의 후보경선시기에 이루어지는 사전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당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

10)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김진표 후보는 질문항을 두고 갈등을 보였으며, 결국 (1) "김문수와 단일후보 김진표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 (2) "김문수와 단일후보 유시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 등 두 가지 질문을 묻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민주당 블로그, 2010. "경기 도지사 김진표 후보 선거인단모집 등록안내와 당원행동." <http://www.minjoo.kr/blog/2433>(검색일: 2010. 7. 25).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패널조사(2차 전국조사 6.3~5).

〈그림 2〉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시점

가 공천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후보자들의 본선경쟁력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2〉가 보여주듯이 EAI 2차 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가운데 1달 전 또는 그 이전에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한 이들은 27.4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며, 1주 전 경 또는 그 이후에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한 이들은 각각 22.9퍼센트와 30.0퍼센트였다.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일을 1주 정도 남겨두고 지지후보를 결정한 것이다.<sup>11)</sup> 이러한 경향성은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무려 68.0퍼센트가 1주 전 경 또는 그 이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달리, 지지하는 특정한 정당이 있는 이들 가운데 약 49.4퍼센트만이 이처럼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EAI 1차 패널조사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또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각각 29.4퍼센트와 1.9퍼센트였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 88.4퍼센트,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던 이들 가운데 29.4퍼센트가 2차 패널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9.5퍼센트로, 거의 1/3 정도

11)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6·2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 분석결과도 이와 매우 유사하여, 이에 따르면 1주 전 경 또는 그 이후에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한 이들은 각각 25.6퍼센트와 37.1퍼센트였다.

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1차 패널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정당들이 주장하듯이 경선시점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경쟁의 틀에서 새로운 선택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후보경선과정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표명이 본선에서 동일한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후보경선과정에서의 각 당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통해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표 3〉은 EAI 1차 패널조사에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2차 패널조사에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교차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1차 패널조사에서 각 당에 대하여 투표할 의지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하였으며,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였다. 1차 패널조사에서 한나라당에게 투표하겠다고던 유권자들 가운데 약 14퍼센트, 민주당의 경우에는 27퍼센트 정도가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였다. 1차 패널조사에서 이 표에 포함된 6개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히고, 그대로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투표자들 가운데 겨우 56.2퍼센트에 머물렀다.

더구나, 경쟁정당의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후보경선시점의 여론조사에서 본선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EAI 2차 패널조사에 따르면

〈표 3〉 투표 의향과 투표 참여

투표할 정당 (1차 패널조사)	투표한 정당(2차 패널조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기타
한나라당	85.8	4.2	0.7	1.0	0.7	4.5	3.1
민주당	8.3	72.9	1.7	0.0	1.7	12.7	2.8
자유선진당	0.0	7.7	92.3	0.0	0.0	0.0	0.0
민주노동당	11.1	27.8	0.0	44.4	0.0	5.6	11.1
진보신당	0.0	35.7	7.1	14.3	14.3	21.4	7.1
국민참여당	7.4	11.1	0.0	0.0	3.7	77.8	0.0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전국패널조사(1차 조사: 2010. 5. 4~6; 2차 조사: 6. 3~5).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후보자 개인, 정책과 공약, 당선가능성을 보고 투표하였다는 응답자들은 각각 29.5퍼센트, 27.5퍼센트, 8.4퍼센트였으며,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하였다는 이들은 겨우 26.1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본선에서 소속정당,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경쟁 후보의 특성은 후보경선과정에서 대항했던 당내 경쟁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며 당선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로 인해서 후보자공천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본선경쟁력을 가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 V. 나오며: 서베이 민주주의의 타당성

지금까지 이 연구는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선출을 위해 널리 활용해온 여론조사 방법을 규범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최근의 6·2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천과 후보단일화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여론조사는 국민적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본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정당조직의 정비를 위해 활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출권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편적이며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범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여론조사기관의 조건과 조사방법의 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투표행위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6·2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사례를 분석하여 여론조사와 참여비용이 높은 국민선거인단에서 후보들의 득표율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는 EAI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2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시기를 전후로 이루어진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후보에 대한 선호가 본선에서의 투표결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선거에 임박해서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경선시기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들의 선호가 선거시기의 투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는 변화하며,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같은 약소정당의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경선시기 지지의사를 갖고 있던 이들이 투표에 불참한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다. 경선시기 지지의사를 표명한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투표한 이들이 전체 유권

자들 가운데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후보경선시기 유권자들의 지지정당이 투표정당과 현격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별하기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하겠다는 정당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직후보자선출방식은 국민경선이라는 미명아래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캠페인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 방법이 인지도가 높은 현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여론조사 방법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선거인단 및 당원여론조사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리접수, 명의도용 등의 문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공천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선출과정에서 서베이 민주주의는 과연 바람직하며 실현가능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에 대한 답변은 민주주의의 조건을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표출되는 정치적 선호의 반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선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과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설문조사를 공직후보자선출방식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를 외면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천방안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양승찬(2004)이 주장했듯이 여론조사의 재원마련과 체계적인 조사추진을 위해 학계, 조사기관, 언론사 사이의 협력적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원택(2009, 59)이 "편법"이라고 단정할 만큼 여론조사를 이용한 공천방식이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다양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극복되더라도 이를 이용한 공천방식의 비민주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강남준. 2002. "선거결과 예측 여론조사의 개선방안." 『의정연구』 8집 2호, 123-153.
- 강원택. 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구』 14권, 35-63.
- 경향신문. "유시민,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확정." 2010. 05.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31025111&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31025111&code=910402)(검색일: 2010. 7. 29).
- 김춘석·정한울. 2010. "6·2 지방선거방법론 논쟁: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제언."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5호. 2010. 7. 2.
- 모종린·전용주. 2004.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33-253.
-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후보단일화 공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8. <http://www.minjoo.kr/news/news.jsp?category=column&id=2433>(검색일: 2010. 7. 29).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국정당학회보』 7집 2호, 41-59.
- 박명호. 2007.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집 2호, 79-95.
- 양승찬. 2004. "총선보도 이것만은 고쳐보자: (2)경마식 보도." 『신문과 방송』 2월호, 48-51.
- 오마이뉴스. "민주당 고희범, 제주지사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선출." 2010. 5.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943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9435)(검색일: 2010. 7. 29).
- 윤종빈. 2008. "2007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1호, 31-55.
- 이동운.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 의 문제점—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5-37.
- 이종수. 1996. "선거예측 여론조사의 정확성 결정요인 분석." 『의정연구』 2집 2호, 189-210.
- 이현우. 2006.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평가: 대표성, 민주성, 자율성."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19-245.
- 일간경기. "'유시민-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경쟁방식 합의." 2010. 5. 3. <http://www.ilgank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90>(검색일: 2010. 7. 29).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17-236.
- 제주의 소리. "고희범 제주 야권 단일후보 확정 ... 도지사 선거 '3파전'" 2010. 5. 10. <http://www.>

- jejusori.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0469(검색일: 2010. 7. 29).
- 조성겸. 1997.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와 할당표집 방법의 문제점.” 『언론과 사회』 18집, 29-53.
- 조성겸·김지연·나윤정·이명진. 2007.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6년 지방선거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8권 1호, 31-54.
- 조선일보. “김진표·유시민 단일화 ‘여론조사 50%+국민참여경선 50%’로.” 2010. 5. 4.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0234.html](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0234.html)(검색일: 2010. 7. 29).
- 조선일보. “날 짝어야 ‘콘크리트 道政’ 끝내.” 2010. 5. 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9/201005290004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9/2010052900048.html)(검색일: 2010. 7. 29).
- 중앙일보. “경남지사 야권 단일후보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결정.” 2010. 5. 1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134398](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134398)(검색일: 2010. 7. 29).
- 프레시안. “유시민, 0.96%p 차이로 김진표 꺾고 단일후보 확정.” 2010. 5. 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513102543&section=0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513102543&section=01)(검색일: 2010. 7. 29).
- 한겨레 신문. “‘족집게’ 출구조사 득표율까지 적중.” 2010. 6. 4. 8A.
- Hazan, Reuven. 2007. “Candidate Selection.” In Lawrence LeDuc,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 eds. *Comparing Democracies 2: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London: Sage, 108-126.

ABSTRACT

---

## Survey Democracy?: A Case Study of 2010 Regional Election in Korea

Byong-Kuen Jhee |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rvey-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method (SDCSM) which has been widely adopted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the SDCSM, in which selectorates are survey respondents, is accordance with democracy and whether it functions as primary elections that effectively reflects political preferences of constituents. Analyzing the panel survey dataset for the 2010 regional election culled by the East Asian Institute, it shows that there exist notable attitudi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selecting representatives between voters and survey respondents. It also shows that a majority of Korean voters did not make their electoral decision until the last few weeks of the regional election and that almost a half of voters changed their candidate preferences during the campaign period. Based on these findings, it claims that the SDCSM does not help selecting competitive candidates, but causes critical problems in democratizing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

**Keywords:** candidate selection, selectorate, survey, voting, sampling, democracy, regional election